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0(토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·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·☎ (044) 201-342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이번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시가격 관련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.

①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가격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

□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검증의 용이성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 17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표준-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컸던 서울 8개 자치구*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.

* 표준-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%p를 초과하는 서울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동작구, 강남구, 종로구

□ 또한,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집값이 급상승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, 특정 가격대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.

□ 아울러, 서울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감정원과 해당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검토 중으로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.

②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간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□ 이번 조사는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-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

○ 그 결과, 국토부 조사반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에 있어 지자체에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, 지자체도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의 재검토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.

○ 앞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조선일보 4.20(토).) >

- ◆ 공시가 갈수록 난맥상...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(매일경제)
 - 일각에서 검증이 용이한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는 가능성 제기
 -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고가주택일수록 크게 올려
 - 국토부 검증은 서울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어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불가피
- ◆ 애초 잘못된 표본이 문제(조선일보 - 기자의 시각)
 -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들쭉날쭉 올린 탓
 - 표본 선택은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
 - 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업무를 뺏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욱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